

현안과 과제

■ '내수 디플레이션' 우려된다
- 세월호 충격이 서민형 자영업자에 집중

1. ‘내수 디플레이션’ 우려

○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, 내수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되는 ‘내수 디플레이션’ 우려

-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, 요식업 등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이 집중되고 있음

- 레저업의 신용카드 승인액이 세월호 사건 이전(4.1~4.15일)에는 12.9% 증가하였으나, 사건 이후(4.16~4.30일)에는 -3.6%로 감소세로 전환
- 요식업은 12.7%에서 7.3%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, 여객선 운송업은 41.8%에서 -29.9%로 급락

- 내수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되는 ‘내수 디플레이션’에 빠질 가능성 대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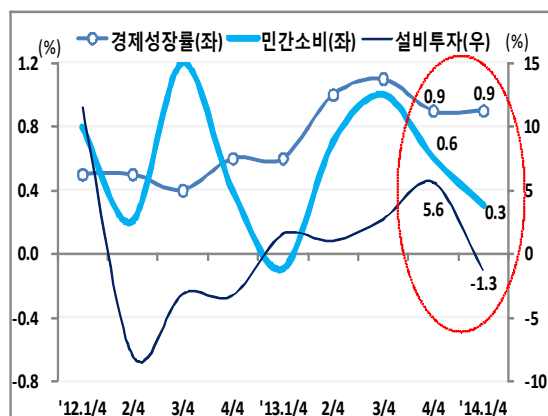
- 민간소비 증가율(전기대비)이 2013년 3/4분기 1.0%를 정점으로 4/4분기 0.6%, 2014년 1/4분기 0.3%로 지속적으로 하락. 설비투자도 2014년 1/4분기에 -1.3%로 감소세로 전환
-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가운데 세월호 충격이 겹치면서 올해 2/4분기에 경기회복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‘소프트패치’¹⁾가 불가피
- 세월호 충격으로 인한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 악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, 민간소비와 투자의 동반 침체로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‘내수 디플레이션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< 세월호 사건 전후 신용카드 승인 규모 증가율 비교 >

세부 업종	사건 이전 (4.1~4.15)	사건 이후 (4.16~4.30)
요식업	12.7	7.3
레저업	12.9	-3.6
운송업	13.9	15.6
여객선	41.8	-29.9

자료 : 대한민국정부.
주 :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.

<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율 >



자료 : 한국은행.
주 : 증가율은 전기대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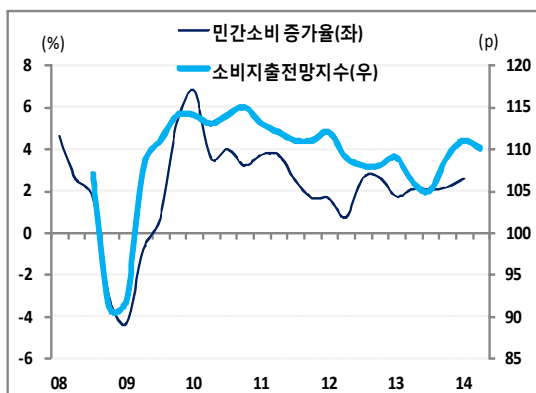
1) 경기 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. 앨런 그린스핀 전(前) 연준 의장이 지난 2002년 11월에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.

2. 최근 내수 경기의 특징

① 민간소비 둔화 속 세월호 충격 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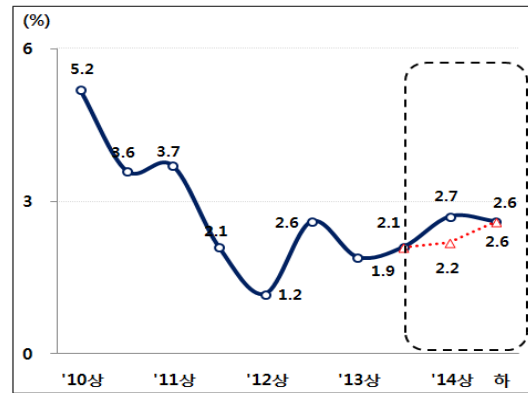
- 실질소득 정체, 미래 불안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
 -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은 정체. 2013년 신규취업자수가 38.6만명, 2014년 1/4분기에 72.9만명에 달하나,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3년 1/4~4/4분기에 각각 0.1%, 1.3%, 1.5%, 0.7%에 불과
 - 노후불안, 일자리불안, 주거불안 등으로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리면서 평균소비성향($\frac{\text{소비지출}}{\text{가처분소득}}$)이 2013년 1/4분기 75%에서 4/4분기 73%로 하락
- 세월호 사건의 충격 여파로 소비심리 냉각
 -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, 6개월 후의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은 4월에 110p로 전월대비 1p 하락. 본 조사가 4.11~4.18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, 4.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
- 세월호 충격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, 2014년에 민간소비 증가율은 0.3%p, GDP 증가율은 0.1%p 하락하고, 일자리는 7.3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가정 : 소비지출 중에서 세월호 충격과 관련이 깊은 오락문화, 음식숙박 부문의 비중은 약 20%인데, 해당 분야의 지출이 5% 감소한다고 가정
 - 민간소비증가율 : 2/4분기 1.0%p 하락 (상반기는 0.5%p, 연간으로는 0.3%p하락)
 - GDP증가율 : 2/4분기 0.5%p 하락 (상반기는 0.3%p, 연간으로는 0.1%p 하락)
 - 일자리 : 7.3만개 감소

<민간소비 및 소비지출전망 추이>



자료 : 한국은행.
주 :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.

<세월호 충격과 민간소비 전망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주1 :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.
주2 : 2014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.

○ (투자 부진 지속)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건
설경기 회복세도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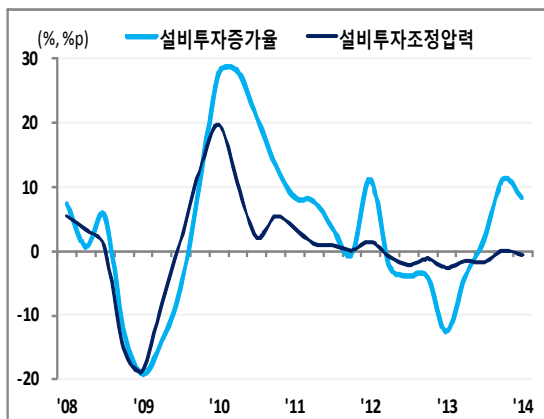
- 설비투자는 예상보다 부진, 향후에도 완만한 증가세에 그칠 전망

- 설비투자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이 2013년 1/4분기 -12.7%에서 4/4분기에 10.9%로 상승하였으나, 2014년 1/4분기에 8.1%로 주춤. 한편 전기 대비 증가율은 2013년 4/4분기 5.6%에서 2014년 1/4분기 -1.3%로 급락
- 선행지표인 설비투자조정압력²⁾이 2013년 4/4분기 0.1%p에서 2014년 1/4분기에 -0.6%p로 하락 전환되어, 향후 설비투자는 큰 폭의 회복세가 어려울 전망

- 건설투자와 건설수주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건설경기 회복세도 미
약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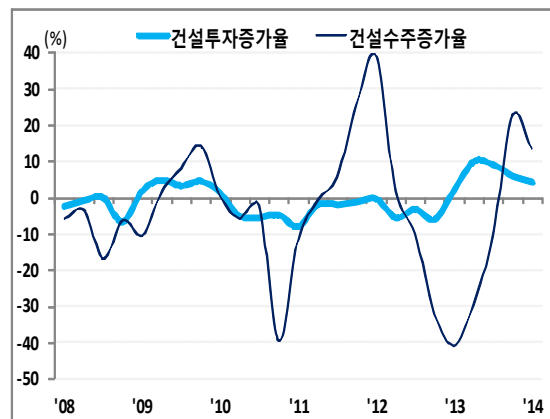
- 건설투자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은 2013년 2/4분기의 10.0%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4년 1/4분기 현재 4.1%를 기록
- 선행지표격인 건설수주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역시 2013년 상승세를 보이며 4/4분기에 22.4%까지 상승하였지만 2014년 1/4분기 13.4%로 증가폭 둔화
- 공종별로 보면 토목 부문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,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의 증가율이 미약한 수준임

< 설비투자 및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.
주 :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.

< 건설투자 및 수주 추이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통계청
주 :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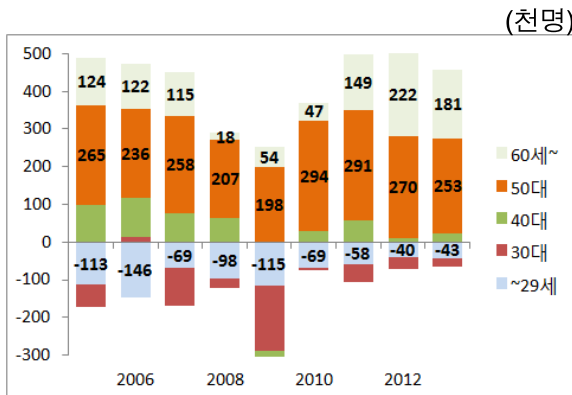
2)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에서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뺀 수치임.

③ 고용증가 속 일자리의 질 악화

○ 지표경기 회복과 정부의 일자리창출 노력으로 신규취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나, 실질소득 증가세 미약으로 고용의 질 악화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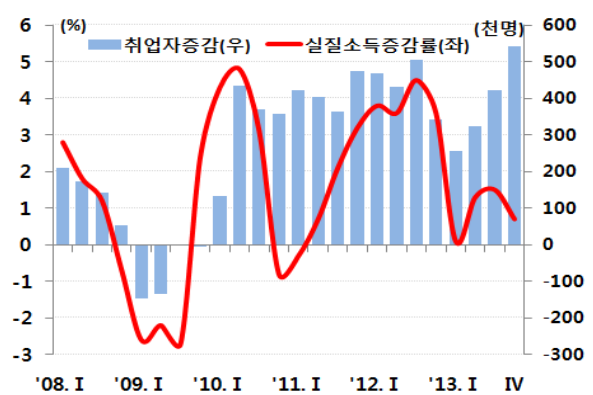
- 여성과 장년층이 고용 창출을 견인하고 있으나, 청년고용은 오히려 악화
 - 여성 :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취업자수 지속 증가. '14년에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증가폭이 커질 전망
 - 장년층(50대 이상) : 신규취업자수 지속 증가. 정년연장 법제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향후에도 증가세 지속 예상
 - 청년 :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3년에는 고용률이 처음으로 40% 아래로 추락
- '고용률 70% 로드맵' 등 정부의 일자리창출 노력도 고용여건 개선
 - 창업 활성화,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는 물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, 고용-복지 연계, 여성·장년·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대책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지속
- 단,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 증가세가 1% 미만으로 미약하여 고용의 질 악화 우려
 - 2013년 신규취업자수가 38.6만명, 2014년 1/4분기에는 72.9만명에 달하나,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3년 1/4~4/4분기에 각각 0.1%, 1.3%, 1.5%, 0.7%에 불과

<연령별 신규취업자 추이>



자료 : 통계청.
주 :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.

<실질소득 증감률 및 취업자 증감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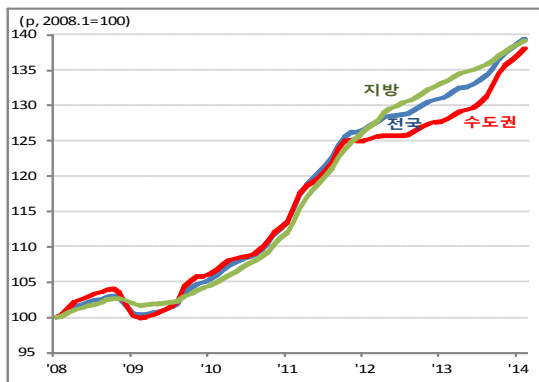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.
주 :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.

④ 주택시장 회복 속 전세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

- 부동산 시장 : 비수도권 중소형 중심 매매시장 회복 속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
 - 주택매매시장 : 2012년 이후 수도권 중심 침체 지속. 2013년에 발표된 4.1대책과 8.28대책, 12.3대책이 이어지면서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
 - 전세시장 : 2008~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상승세 지속. 이는 임대인의 월세선호와 임차인의 전세선호 현상 지속 등 근본적인 수급 불안정에 의한 것으로 향후에도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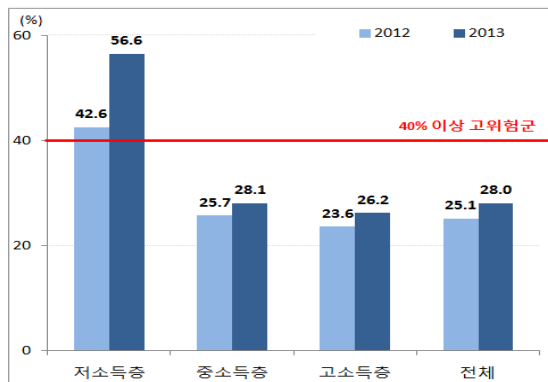
- 가계부채 :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³⁾
 - 가계부채(가계신용 기준)는 2002년 465조원에서 2013년 1,021조원으로 연평균 7.4%씩 증가.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도 113.8%에서 136.3%로 상승
 - 이는 2013년 말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, 신규·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종료로 앞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이 원인
 -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채무상환비율(DSR; 원리금상환액/가처분소득)이 2012년 42.6%에서 2013년 56.6%로 상승(DSR이 40%를 넘으면 고위험가구)
 - 내수침체와 베이비붐세대의 대규모 자영업 진출 등으로 자영업자(가계부채의 43.6% 차지)의 채무상환비율도 31.5%에서 34.9%로 상승
 -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생계부담을 느끼는 응답자가 70% 상회, 실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구도 과반을 차지

< 지역별 주택전세가격지수 추이 >



자료 : 국민은행 데이터 재구성

<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 현황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3) 현대경제연구원(2014.4월), “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” 참조.

3. 시사점

-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서민형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감안, 내수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
 - 서민형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9일 발표한 ‘긴급민생대책’을 차질 없이 시행
 - 내수 급랭을 막기 위해 당초 목표보다 7조 8천억 원을 확대하기로 한 상반기 재정 투자 집행을 차질 없이 시행
 - 내수 침체에 따르는 민생 경제 악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
 - 특히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영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과 운송, 숙박 업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
 -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자영업자(고용주)에 고용되어 있는 시간제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
 - 자영업자 재취업 촉진 대책, 자영업 자율규제방안 마련, 준비된 창업의 육성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
 -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는 188만명(2013년 기준)이고, 그중 33%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, 44%는 1~4인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
 -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‘사회부조운동’ 실시
 - 고소득층가구의 소비여력(가처분소득 - 소비지출)이 月264만원에 달하며, 그중 10%만 추가 소비되어도 신규일자리는 연간 16.8만명, 국내총생산(GDP)은 7.2조원 증가⁴⁾
 - 고소득층 등 국민들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‘국내 소비를 통한 사회부조운동’ 실시
 -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
 - 국내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약 569만 가구로 추정되며, 그중 집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는 약 144만 가구⁵⁾
 - 집 살 여력 있는 무주택자는 저금리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대책이, 유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, 상속 등을 위한 주택구입 촉진 정책 필요
 -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지속 및 안전관련 규제 강화
 -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노력은 지속하되,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
 - 안전관련 규제는 안전관련 부문 투자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어야 함

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 외 (2072-6219, sododuk1@hri.co.kr)

4) 현대경제연구원(2014.2월), “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” 참조.

5) 현대경제연구원(2014.5월), “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” 참조.